



왼쪽부터 신정훈·김승남 의원

민주당 전남 국회의원들
“도당위원장 합의를 추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개편대회가 8월초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당일 경선이 아닌 합의추대 형식으로 차기 도당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12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10일 긴급 오찬 회동을 갖고 도당위원장 선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10명의 전남 의원중 도당위원장 출마 의사가 있는 3명을 제외한 7명이 참석 대상이던 이날 회동에는 지역 최다선인 3인의 이계호 의원과 현 도당위원장인 서삼석 의원 등 4명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도당위원장을 놓고

신정훈 “합의추대 공감”

김승남 “경선도 불사”

치열한 경선은 맞지 않더라도 합의추대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나눴다.

이계호 의원은 “전남도당도 광주시당처럼 추대하는 게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에 맞다”며 “주말 중 두 후보에게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만일 후보들이 경선을 고집할 경우 나머지 의원들이 협의를 통해 단독 도당위원장 후보를 결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선출에는 재선의원 출신의 신정훈 의원(나주·화순)과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나선 상태다.

신 의원은 “도당위원장 출마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합의추대가 맞다고 본다”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경선 등은 그때 다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김 의원은 “도당위원장은 대선 의원 순으로 합의해서 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경 안되면 경선까지 치를 각오다”라고 강한 입장이었다.

오세훈·홍정욱·김동연에 안철수까지?
서울시장 보선 野 잠룡파티

2022년 대선 1년 앞두고 잠룡 조기 등판전망도

민주당내 후보 거론되지만 후보 내건 어려울 듯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의 판이 커졌다. 2022년 대선을 1년 앞두고 치르는 ‘소통형’ 서울시장 선거이기 때문에 대선 전초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정국 주도권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야권에서는 대권 잠룡이 조기 등판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보궐 선거(2021년 4월7일)는 지난 3월17일부터 내년 3월8일까지 기간에 사퇴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 기초·광역단체장 등의 자리가 비게 된 곳을 대상으로 한다. 2022년 6월30일까지 임기인 박시장은 임기 절반을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서울시장은 국무위원급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장과는 달리 의결권이 없지만 국무회의에 배석한다. 인구가 1000만명이 넘는 메가도시,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중심지인 서울시장을 맡는 만큼 국정운영에도 관여한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서울시장을 지낸 정치인이 대권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이기도 하다. 특

히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기를 잡으면 대선까지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박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발언을 자제하고 있지만 안희정 전 총선지사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박시장까지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면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당내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4선의 우상호 의원, 재선의 박주민 의원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시장은 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 야권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정욱 울카니카 회장을 비롯해 꾸준히 영입설이 제기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거론된다.

오 전 시장의 경우, 박시장 직전 단체장이었던 점이나 무상급식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남아 있

다는 점이 부담이지만 최근 안신소득 등 정치적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다.

홍 회장은 정치적 공백이 길지만 꾸준히 대권주자로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딸의 마약 밀반입 재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 전 부총리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통합당 대권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영입 제의가 있을 수도 있다.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보궐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안 대표가 선거 전면에 나서서 야권 승리를 이끌고 상승세를 대선까지 끌고 간다면, 대선 국면에서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 총선 이후 안 대표가 외쳐온 야권 재편 과도 맥을 같이 한다는 분석이다.

대권주자외에도 나경원·김용태·이혜훈·지상욱 등 전직 의원과 이준석 전 통합당 최고위원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신울 명지대 교수는 뉴시과의 통화에서 “서울시가 가지는 상징성은 충분하다. 내년 4월까지 분위기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모르지만 야당에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대선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강한 후보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대선의 길목에 있기 때문에 대선주자가 아닌 강한 후보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혼돈의 박원순·백선엽 조문
靑, 조화도 조문도 ‘똑같이’

고인 예우 갖추되 논란 최소화 의도

청와대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백선엽 예비역 대장(장군) 빈소에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보낸 것과 관련해 찬반 입장이 나뉘는 상황에 대해 “청와대 차원에서 다른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12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명의의 조화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것 같다”라는 질문에 “일단 논란이 있는지, 급해요”라면서도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새벽 스스로 숨을 거둔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에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발송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부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이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을 찾아 조문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박시장이 숨지기 직전 전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피소당했던 만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하며 대통령 명의로 조화를 보낸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또 다른 ‘조문 정국’의 한 축으로, 지난 10일 별세한 국군장군 원로 백선엽 장군의 빈소에 보낸 문 대통령 명의의 조

화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백 장군은 6·25전쟁 초기 국군 1사단장으로 다부동 전투 승리를 이끌며 북한의 남침에 대해 “청와대 차원에서 다른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12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명의의 조화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것 같다”라는 질문에 “일단 논란이 있는지, 급해요”라면서도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명의의 조화와 노 실장의 조문을 통해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추면서도 찬반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논란을 확산하지 않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고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조화를 보냈고 노영민 실장 등이 조문을 다녀왔다”라며 “고 백선엽 장군에게는 (대통령 명의의) 조화는 이미 전달이 됐다. 그 행위 이외에 청와대가 다른 입장을 밝힐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